현장시선



SNS를 이용한 의류 구매 시 주의할 점

김 형 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사무국장

지난달 말 태풍이 제주에 영향을 미친 이후 가을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쌀쌀해진 날씨에 따라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요즘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TV 홈쇼핑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의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에 따라 의류 관련 전자상거래 분쟁이 발생하면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소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와 상품의 가격, 공급방법, 청약철회 조건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SNS를 이용한 판매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SNS를 통해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까지 결제했으나, 상품 수령 후 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고 SNS를 차단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SNS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거나 사업자정보, 특히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구제 신청이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소비자 주의사항을 숙지하신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첫째, 사업자정보 확인이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한다.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전소법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피해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둘째, 거래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댓글이나 쪽지,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서만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마켓에서의 구매는 피한다. 셋째,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피해발생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응하기 쉬운 결제수단을 이용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약정한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좌이체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마켓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 두고, 구매한 물품내역과 송금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를 근거로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대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받는다.

물품구입 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거래만을 강요하거나, 판매자와 마켓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는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약속된 배송일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구매를 취소한다. 이런 사전 확인과 신속한 대응이 온라인 쇼핑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래픽 뉴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현황

9월 30일~11월 3일 기준



연합뉴스 자료: 금융위원회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열린마당

공공기관 제주 이전, 지방분권의 새로운 출발점



김 정 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오랫동안 지방분권을 이야기해 왔다. 지역의 일은 지역이 결정해야 한다는 믿음에서다. 그러나 권한을 넘겨받는 것만으로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권한을 행사할 인력과 전문성, 이를 뒷받침할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제주 지방분권의 과제로 바라보는 이유다.

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기관이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에 자율과 책임만 강조해서는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이 미래를 설계하려면 국가의 기능과 자원도 지역에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제 그 성과가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제주에 적합한 공공기관이 이전해 지역 대학·기업·주민과 협력한다면 지역의 역량은 커지고 기관도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관의 주소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이전기관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도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의견을 모으고 협력과 상생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공공기관 제주 이전은 권한과 역량을 함께 나누고 지역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방분권의 실천이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제주에서 그 길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월동무 비상품 유통 근절 결의, 실천에 달려

월동무 비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가격 폭락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의 대책이다.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최근 세척장 운영자와 행정, 농협, 월동무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월동무 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비규격품의 도외 반출과 톤백(대형 포대) 출하, 편법 박피·절단행위가 제주 겨울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을 초래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세척농산물 유통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도외로 반출하는 세척무는 개당 1~2.2㎏ 규격을 준수해야 하고 톤백 출하는 금지된다. 또 지정된 규격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규격 외 물량은 도외 반출 대신 도내에서 폐기하거나 재유통이 불가능한 가공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물량에 따라 1톤 미만 100만원부터 5톤 이상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형 자조금과 집하장·세척장비 지원 등 농업보조금도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제주 월동무는 비옥한 화산토에서 겨울을 나며 자란 무다.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깊어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과잉생산과 비상품 출하로 가격 폭락이 되풀이 돼왔다. 특히 비상품 출하는 우량상품 가격까지 끌어내려 결국 산지폐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통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 애써 생산한 월동무가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유통질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얼마 전 40대 아버지와 어린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는 호주에서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딸과 함께 귀국, 제주에서 생활해 왔다. 경찰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동반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찰에 딸의 안전 확인 등을 요청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는다.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112 신고는 675건에 이른다. 전년도보다 40.6%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101건으로, 전국 평균(71건)을 웃돈다.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신고도 1066건으로, 전년보다 36.8% 늘었다.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37건(32.2%)이다. 학대 판단 사례 가운데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는 192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어 낯선 사람 26건, 대리양육자 17건, 친인척 3건 등 순이다.

아동학대는 끔찍한 범죄다. 피해 아동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며,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이유다. 주변을 둘러보고, 의심스러우면 경찰·행정관서에 알려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경찰·학교·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 등을 아우르는 감시·보호체계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고, 피해 아동에게는 적절한 치유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들이 폭력·학대에 희생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상속포기 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성주(1960. 03. 05. 생)
• 최후주소 :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애길 41
상기자는 2026년 7월 20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6년 10월 28일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2026느단 1154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삼성로5길 20-2 (일도이동)
2026. 11. 6.
공고인 (상속포기자)
김하정, 김재정, 김범주, 김희정, 김범준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산담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억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
하나장의사
616-08-85402